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76
----------	-------

발의연월일 : 2022. 9. 15.

발 의 자 : 민병덕 · 강민정 · 강준현
권인숙 · 김경만 · 김민기
김성주 · 김승원 · 김정호
김한규 · 김홍걸 · 민형배
박영순 · 송재호 · 신정훈
신현영 · 양이원영 · 오영환
위성곤 · 유정주 · 윤건영
윤영덕 · 윤재갑 · 이성만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원택
이탄희 · 이학영 · 임종성
한준호 · 허 영 · 허종식
황운하 의원(34인)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6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 다.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며,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용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라.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생계안정”을 “일상회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농업”을 “상업·농업”으로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제66조의2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u> ----- ----- ----- ----- ----- ----- ----- ----- -----

<p>다.</p> <p>1. (생 략)</p> <p>2. <u>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u></p> <p><u><신 설></u></p> <p>3. ~ 4. (생 략)</p> <p>5. <u>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u></p> <p>6. (생 략)</p> <p>7. 주 생계수단인 <u>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u>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p> <p>8. ~ 9. (생 략)</p> <p>④ ~ ⑦ (생 략)</p> <p>제66조의2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u>-----</p> <p>3.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 제1항에 따른 <u>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u></p> <p>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6. -----<u>일상회복</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u>상업·농업</u>-----</p> <p>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2 ①-----</p>
---	---

<p>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 ----- ----- ----- ----- ----- -----지 급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③·④ (현행과 같음)</p>
---	---